

CNG자동차 용기 재검사 제도 도입

지난해 CNG버스 폭발사고 이후 CNG차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CNG자동차 용기에 대한 재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18일, 19일 연속 보도된 관련 기사를 게재한다.



지앤이타임즈

CNG車 용기 안전 확보 비용 고려됐나?

오는 11월이면 모든 CNG차량에 관해 재검사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CNG차량 용기의 재검사 제도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CNG버스 운송사업자 등 모든 CNG차량 소유주는 법에 따라 CNG내압용기를 초기 3년 뒤에는 상세 외관 검사를 실시한 후 다음 3년 뒤에는 탈거 정밀 검사, 또다시 3년 이후에는 외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현재까지 수수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유럽 선진 사례를 본떠 외관 검사 수수료는 자

동차 1대당 25만 원 안팎, 탈거검사 수수료는 250만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들은 고액 수수료가 부담된다며 정부에 보조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주도적으로 CNG버스를 도입한 만큼 검사 수수료도 책임져야 한다는 게 버스운송사업자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 및 CNG차량 개조업체, 택시운송사업자 등이 손잡고 시범 운행하고 있는 CNG택시의 경우 검사 비용이 고스란히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LPG가격 고공행진에 못살겠다며 택시운송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CNG를 난세의 영웅 연료로 지목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승합·승용·화물 등 CNG 차량이 3만43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7472대 대비 10.9% 증가했다.

택시 및 자가용 등이 구조변경돼 CNG차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타 연료와 CNG연료 중 선택의 기로에서 용기 재검사 비용 및 시간도 함께 고려됐는지 의문스럽다.

CNG車, 연료비 아끼려다 검사비 덤터기 용기검사수수료 수백만원대, 세제개편도 관건

CNG차량으로의 구조변경 과정에서 CNG용기 안전관리 소요 비용 등이 함께 홍보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11월이면 모든 CNG차량에 대해 전면 시행될 CNG용기 재검사 제도 등을 감안하면 CNG연료비가 생각만큼 저렴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승합·승용·화물 등 전체 CNG 차량이 3만43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7472대 대비 10.9% 증가했다.

전체 CNG차량 중 사업용 차량은 88.2%에 해당하는 2만6840대를 차

지하고 있으며 비사업용 차량은 11.8%에 해당하는 3593대를 기록하고 있다.

사업용 차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9% 증가했으며 비사업용 차량은 37.9% 증가했다.

비사업용 차량이 큰 폭 증가한 데는 유가 고공행진에 몸살을 앓던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CNG연료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CNG용기 재검사 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개조 비용부터 재검사 기간 동안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몇 곳 안되는 충전소 등을 감안하면 CNG연료가 생각만큼 저렴한 연료는 아니다.

오는 11월 24일부터 모든 CNG차량 소유주는 법에 따라 CNG내압용기를 초기 3년 뒤에는 상세 외관 검사를 실시한 후 다음 3년 뒤에는 탈거 정밀 검사, 또다시 3년 이후에는 외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현재까지 수수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탈거검사 수수료가 적게는 25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고액 수수료뿐만 아니라 추후 친환경 세제개편이 단행되면 현재 타연료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CNG연료비는 더욱 보장할 수 없다.

지난 몇 달간 국회와 정부, 학계와 연구계, 시민단체 등이 총 망라돼 5차례에 걸쳐 논의된 환경에너지세제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휘발유, 경유, LPG 외에 CNG에도 과세해 수송용 에너지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CNG의 경우 유류세 부과 대상에 제외되면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시내 버스 등의 수송연료로 폭넓게 보급되고 있는데 만약 환경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면 경쟁 연료와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사안들이 감안되지 않고 단순 판매 가격으로 CNG연료가 저렴하다고 판단해 무턱대고 CNG차량으로 구조 변경한 후 시름을 앓는 운전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19일 기준 천연가스 차량협회에 따르면 CNG연료 가격은 m³당 902.56원을 나타나고 있으며 오피넷에 공개된 LPG가격은 L당 1099.65원, 경유는 L당 1756.54원, 휘발유는 L당 1939.40원을 기록하고 있다.